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안

의안 번호	132
----------	-----

제안연월일 : 2007. 11. 6.

제안자 :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우리구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로서 온갖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중량물재생센터가 30여년 동안 존치되고 있어, 우리구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집약화, 지하화 하여 상부는 공원 및 여가시설 등 친환경적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잉여부지에 생태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등 중량물재생센터의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위명칭 :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나. 특별위원회 구성 :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 구성위원 : 14명(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153회 임시회 개최중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선임

다. 활동기간 : 2007. 11. 2. ~ 지속적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8조

2007. 11. 6.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계획서(안)



중랑물재생센터리모델링추진특별위원회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계획서안

I. 목 적

우리구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로서 온갖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가 30여년 동안 존치되고 있어, 우리구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집약화, 지하화하여 상부는 공원 및 여가시설 등 친환경적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잉여부지에 생태 주거단지를 건립하는 등 중랑물재생센터의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함.

II.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현황(현재)

1. 시설현황

- 위 치 :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 부지면적 : 794,000m² (약24만평)
- 시설용량 : 171만톤/일 (하수 10개구, 분뇨 13개구, 정화조 11개구 처리)
- 주요시설 : 1처리장(25만톤/일), 2처리장(21만톤/일), 3처리장(100만톤/일), 4처리장(25만톤/일), 동부위생처리장.
- 건립년도 : 1970 ~ 1997 ('76. 4월 개소)
- 총사업비 : 3,120억원

2. 우리구 제안사항 (2007.01.19 서울시장 초도방문 시)

- 제안내용 - **현 하수처리 시설을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집약화, 지하화 한후 잉여부지는 개발**
- 개발방안 : 민간업체 제안공모 추진
 - 지하화 후 상부는 공원 및 여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 시설 집약화로 발생되는 11만평 정도의 부지에 타워형 아파트 등을 건립

※ 지하화에 소요되는 약1조 5천억원은 민간업체의 분양대금으로 충당 가능 (110,000평 × 2,000만원 = 2조2천억원)

3. 서울시 처리결과 및 우리구 검토의견

서울시 처리결과	우리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처리장(171만톤/일)의 지하화 및 집약화 공법 적용 사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화 사례 : 부산 해운대 6.5만톤/일 스웨덴 37만톤/일 - 집약화 사례 : 부산 동부 13.5만톤/일 영국 리버플 38만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100만톤/일 이상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몇 개소 밖에 없으며, ○ 현재 다수 공법이 개발 진행중에 있으므로 대규모 처리장 지하화 집약화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화 사례 : 수원하수처리장 (52만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장 지하화 공사비 및 운영비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현대화 및 집약화로 발생하는 약11 만평 부지 매각으로 충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공사비 : 약1조 5천억원 - 매각 대금 : 약 2조 2천억원 (111,000평 × 2,000만원=2조2천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처리장 내구연한 미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처리장 88년, 4처리장 97년 건설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1. 1부터 적용되는 환경부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3,4처리장은 고도처리 사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방류수질 : BOD 16.4(mg/ℓ) - 환경부 기준 : BOD 10 이하 ※ 근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업체 제안 수용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부지 민간업체 제공시 특혜시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부지 개발은 SH공사 등이 참여한 공공개발을 통해 최대한 공공성 확보 ○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문제 일부 해소

Ⅲ. 특별위원회 구성

1. 명 칭 : 중량물재생센터리모델링추진특별위원회

2. 위원선임

가. 구성위원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14명)

☞ 2007. 11. 2(금)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유 지형위원, ○ 부위원장 : 김 달호위원

☞ 2007. 11. 2(금).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

다. 위원명단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유 지 형	김 달 호	이석권, 방효영, 오수곤, 은복실, 박종현, 윤종욱, 김동중, 송진섭, 김기대, 김복규, 강순심, 송경민.

3. 활동기간 : 2007. 11. 2. ~

Ⅳ. 세부활동계획

1.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계획서(안) 본회의 의결

-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촉구 결의문 첨부

2. 결의문 낭독

가. 일 시 : 2007. 11. 07(수)--- 제2차 본회의 폐회 직후

나. 장 소 : 본회의장

다. 대 상 :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3. 결의문 유관기관 송부

- 유관기관 :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성동구청장, 각구의회, 성동구 갑·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의원, 관내 각 언론사 등

4. 홍보활동 계획

가. 구민 관심도 제고

○ 내용 : 중량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사업에 성동구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일시 : 2007. 11. 2 ~ 지속적

○ 대상 : 서울시민

○ 방법 : 구· 동단위 행사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행사시 결의문 배포 및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 설명

나. 케이블TV,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5. 현장 방문 및 견학

가. 중량물재생센터 방문(송정동 소재) - 현장실태 조사

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견학

○ 수원, 기흥, 구갈 하수처리장

○ 현황 벤치마킹

V. 행정사항

1. 세부활동계획의 일정 및 시기 등은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어 위원장, 부위원장이 상세일정 등을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 목적에 부합된다면 필요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위원장이 별도 회의 소집
3.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집행부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사항 등은 특별위원회에 항시 보고



현장사진 (조감도)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촉구 결의문

중랑물재생센터가 위치한 송정, 용답동 지역은 중랑천, 청계천 하류에 인접하여 예로부터 논, 밭의 작물이 잘 자라고 농사가 호황을 이루는 비옥한 토지로서, 근래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공원조성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등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상업유통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로서 온갖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가 30여년 동안 존치되고 있어 우리구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34만 성동구민의 뜻을 모아 성동 지역의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을 통하여 친환경적 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중랑물재생센터는 1970년에 건립되어 현재 서울시 하수의 약 30%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약 30여년 동안 온갖 악취와 환경 오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랑 물 재생센터를 집약화로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과 더불어 성수 신도시 조성, 서울시의 유턴 프로젝트 및 청계천 하류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송정, 용답동 지역은 중랑물재생센터가 위치한 관계로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해 성수 신도시 조성, 서울시 유턴 프로젝트 및 청계천 하류 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촉진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는 성동 지역 발전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34만 성동구민과 함께 『잘사는 성동』 『행복한 성동』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의 추진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함(안 제1조, 제2조)

2)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 7. 24 ~ 8. 12)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하고, “20세 이상 200인 이상”을 “19세 이상 200명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u>의 규정에 의거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법 제13조의4</u>의 규정에 의한 성동구와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u>20세 이상 200인 이상</u>으로 한다.</p>	<p><u>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u>지방자치법</u>」(이하 <u>법이라 한다.</u>)<u>제16조</u>…………… …………… …………… …………….</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법 제16조</u>…………… …………… ……………<u>19세 이상 200명 이상</u>…………….</p>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설명자 및 이유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입법예고(2007. 7. 24 ~ 8. 12)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구청이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기관(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주민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2007. 5. 17)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제정이유

노후된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나.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다. 기금은 동청사 건립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등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안 제3조)
- 라.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4조)
- 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부터 매년 10억원씩 반영 예정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8. 13 ~ 9. 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등
3. 동청사의 매각대금 및 임차보증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동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동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

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동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제7조(지방재정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행 정 재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노후 동청사 신축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동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나.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다. 기금은 동청사 건립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등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안 제3조)
- 라.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4조)
- 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 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함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입법예고(2007. 8. 13 ~ 9. 3)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준공연도별 동청사 현황 】

계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15년	25년이상
20	5	4	1	3	2	5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교부금, 보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동청사 매각대금, 임차비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재정형편상 매년 1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면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특별조정 교부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및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등에 동청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였고,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4조 제4항의 “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제반 규정에 적합하다 하였음
-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9월 30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원조성 등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존속기한 10년 이내를 적용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 하겠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마장동청사 등 건립된지 20년 이상된 노후 동청사가 많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 및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모두가 참여하여 복지·문화·평생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 이와 같이 복합공간으로써의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음
- 또한, 조례제정 형식과 내용,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하고 적절한 조례라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박종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건립기금 총 규모는 얼마이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서울시 교부금, 기타 수익금 등 기금 출연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람 ○ 가장 시급히 건립되어야 할 동청사는 어디이며, 건립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답변바람 	행정관리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청사 건립기금 총 규모는 100억 원으로 예상하며 <u>기금출연 비율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u> ○ 왕십리1·2동과 마장, 사근동 등 총 4개동이 조속히 신축되어야 하며, 건립비용은 <u>왕십리1동과 마장동 총 2개동에 120억원이 소요</u> 될 것으로 예상됨
송진섭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통·폐합에 따라 없어지는 동청사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안 제4조제4항의 “<u>정당한 사유없이</u>”란 용어는 집행부측에서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금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게 아닌지 답변바람 	김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민복지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간</u>으로 활용할 예정임 ○ 일반적인 법률용어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u>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u> 하겠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통·반장 역할이 대폭 감소되어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개 통의 기준을 “6~12개반”에서 “8~15개반”으로, 1개 반의 기준을 “20~40가구”에서 “20~60세대”로 상향조정(안 제2조)
- 나. 모범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1) 2008년 세출예산편성 30,800천원(견학경비 및 강사료,조직일체감 훈련 등)
 - (2) 통장감축(52명) 예산 158,080천원의 19.4% 사용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7.8.28~9.18)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6개반 내지 12개반”을 “8개반에서 15개반”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세대에서 60세대”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구청장은 모범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②1통은 <u>6개반</u> 내지 <u>12개반</u>으로 구성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③반은 <u>20가구</u> 내지 <u>40가구</u>로 구성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 를 가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제11조의2를 제13조로></u></p> <p><u><12조를 제14조로></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p> <p>-----</p> <p>-----</p> <p>-----</p> <p>-----</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②--- <u>8개반에서 15개반</u>-----.</p> <p style="padding-left: 2em;">③--- <u>20세대에서 60세대</u>-----.</p> <p>-----</p> <p>-----</p> <p>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구청장은 모범 ----- 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 학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통·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 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할 사 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 ⑤ (생략)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1. 7.

행 정 재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설명자 및 이유

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행정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통·반장 역할이 대폭 감소되어 통
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
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1개 통의 기준을 “6~12개반”에서 “8~15개반”으로, 1개 반의 기준
을 “20~40가구”에서 “20~60세대”로 상향조정 (안 제2조)

나. 모범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나. 입법예고(2007. 8. 28 ~ 2007. 9. 18)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통·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 교육 및 국내외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통·반의 조직)은 통 조직 상한선을 기존 12개반에서 15개반으로, 반 구성은 기존 40세대에서 60세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통·반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임
- 안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내지 안 제13조(통·반장 교육)는 모범통장 국내외 견학, 통·반장 교육 등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송파, 금천구 등 7개 구청에서 이미 실시중에 있으며 통·반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박종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통장 해외연수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전액 구비 지원인지 답변바람 ○ 타 자치단체의 통장 해외연수 현황을 답변바람 	행정관 리국 장 김 상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u>전액 구비로 지원</u>할 것임 ○ 금천구, 동작구가 선진지 견학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에 <u>인천 연수구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실시</u>하였음
송진섭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개통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존 통의 관할 구역이 넓어지거나 많은 인구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2조제3항에 <u>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수를 가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상황에 따라 구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u>할 수 있음
이석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 설치 기준에 대해 답변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개통의 기준을 “8~15개반”으로, 1개 반을 “20~60세대”로 규정</u>하였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기권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출자 : 성동구청장

1. 제정이유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통합적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5년 단위

나. 사업지구의 지정 등(안 제4조)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 사업 추진

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안 제6조)

○ 심의·자문내용(안 제6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사업지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7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7. 8. 23 ~ 9. 11)결과 : 의견없음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 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동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동구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사업지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관계공무원
3. 건축·도시계획·토목·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사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

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심의·자문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1. 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업무시설(구청사) 나.제1종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도서관등) 다.문화 및 집회시설 라.노유자시설 마.수련시설	
민간건축물	가.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교량 나.고가차도	
도로부속시설물	가.보도육교 나.방음벽 다.방호울타리 라.가로등 마.도로명판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문화관광시설	가.관광안내소 나.관광안내도 다.동상·기념비등(「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 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라.표석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가로녹지시설	가.가로수보호덮개 나.가로녹지대 다.가로화분대 라.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보행자안내표지판 나.자전거보관대 다.주차장안내표지판 라.주차장관리소(박스형) 마.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	
환경관리시설	가.휴지통 나.환경미화원대기소 다.공중화장실 라.전광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가.구두수선대 나.가로판매대 다.버스카드판매대 등 라.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옥외광고물 등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옥외광고물등	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별표】 1.건축물에 속한 광고물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경관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야간경관기본계획(이하 “야간경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별표 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별표 2의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권고
5. 그 밖에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행 정 재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설명자 및 이유

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통합적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 (안 제3조)

나. 사업지구의 지정 등 (안 제4조)

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2007. 8. 23~ 9. 11)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였음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보면

- 안 제2조는 경관법과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적용하여 도시디자인, 경관, 건축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는 왕십리 뉴타운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성동구의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에 관한 기본목표, 추진방향 그리고 권역별·지역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4조(사업지구의 지정 등)**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의 유형을 경관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내지 안 제14조**는 도시디자인의 계획수립,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구로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다만, **안 제6조**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별표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것은 기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어 또 다른 규제를 야기하는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음
또한,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디자인 조례와 같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안 제10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도시디자인 심의사항 등을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 안 제13조는 위원회 참석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위원회 개최시마다 적지않은 수당이 구비로 지출되므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위원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견고 싶은 거리조성, 지역녹화,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 제정 형식 및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타당한조례라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별첨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박종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예산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바람 ○ 민간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하는데, 또 한번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이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은 다른 규제를 야기하는게 아닌지 답변바람 	행정 관리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연간 900만원 정도</u> 예상됨 ○ 서울시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만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경관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따로 제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 도시디자인 위원 임기에 대해 연임 제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김 상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관법을 구체화</u>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건축, 조경, 도시계획, 조형 등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많은 서울시와 달리, 성동구에는 <u>도시디자인 8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u>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4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개정 이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재래시장만 지원하였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상점가도 지원 확대함(안 제1조)
- 나.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리자 지정(안 제4조)
-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함(안 제5조)
- 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 마. 상인조직 또는 관리자에게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2) 「유통산업발전법」 등

(3)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7. 8. 2 ~ 8. 21) : 의견 없음

(2) 첨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
제8항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제4
항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
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

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

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재래시장 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성동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개발 등의 사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동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2.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구청장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구청장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단,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청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

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폐지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상점가,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집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집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집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과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 과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납 과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시 · 도 시 · 군 · 구 금고 귀하	수입일 부 인	OO은행 OO지점		수입일 부 인

A80 ×160mm
신문용지 54kg/㎡

A80 ×160mm
신문용지 54kg/㎡

A80 ×160mm
신문용지 54kg/㎡

A80 ×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단 체 명		납 부	단 체 명		납 부	단 체 명	
의 무 자	성 명		의 무 자	성 명		의 무 자	성 명	
자	주 소		자	주 소		자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겠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입원 부 인	수입원 부 인		수입원 부 인	수입원 부 인		수입원 부 인	수입원 부 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시 · 도 시 · 군 · 구 징수관(인)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관 련 법 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행 정 재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설명자 및 이유

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재래시장만 지원하였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상점가도 지원 확대함 (안 제1조)

나.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리자 지정 (안 제4조)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함(안 제5조)

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함
(안 제11조)

마. 상인조직 또는 관리자에게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방자치법」 등

나. 입법예고(2007. 8. 2~ 8. 21)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10월 27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본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 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2장은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장은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범위·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안 제5장은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 안 제5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상인회의 설립·정관·등록·등록취소·예산의 지원·서류의 비치·운영상황의 공개·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와 제28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 안 제8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35조에서 제41조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부과기준·처분통지·강제징수·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에는 시행일과 함께 유효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오랜 전통과 함께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관내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 및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인해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5년 11월 10일부터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상권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접 상점가를 함께 묶어서 육성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음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생업의 터전이 되면서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조례제정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청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상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위 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송진섭 위 원	○ 재래시장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무등록 시장이 어디이며, 이들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 답변바람	기획재정국장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박종현 위 원	○ 관내 등록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 몇 개소이며, 상점가는 총 몇 개인지 서면 답변바람	한경석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출자 :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예산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예산회계와 동일하게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함
(안 제5조)

- 기금총괄관리관 및 기금경리관이 종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은 재무과장으로 함.
- 기금출납원을 종전에는 위생관리담당주사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함.

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함 (안 제6조)

- 종전에는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명시함.

- 상위법령인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 8. 3 ~ 8. 20)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과 징수관”을 “징수관”으로 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출원”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소관담당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위생업무를 맡은 담당주사”를 “식품위생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1. ~ 3.(생략) 4. <u>기타</u> 법 시행령이 정하는 식품위생 관련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조성) 1. ~3.(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법 시행령이 정하는 식품 위생관련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1. ~ 8.(생략) 9. <u>기타</u>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 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1. ~ 8.(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 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현 행	개 정 안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회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생략)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생략) ③위원장은 기금소관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u>식품위생업무를 맡은 담당주사</u>가 된다.</p> <p>⑤(생 략)</p> <p>⑥(생 략)</p> <p>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u>식품위생팀장이</u> 된다.</p> <p>⑤(현행과 같음)</p> <p>⑥(현행과 같음)</p> <p>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1. 7.

행 정 재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설명자 및 이유

가. 제안설명자 : 보건위생과장

나. 제안이유

기금 관리·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예산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변경 (안 제5조)

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 (안 제6조)

-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내용을 추가 보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입법예고(2007. 8. 3 ~ 2007. 8. 20)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집행방법을 기존 기금운영 부서에서 지출하던 방법을 예산의 회계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재무과에서 지출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 하였음
-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으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을 추가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2006.1.1)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하였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1
----------	-----

발의연월일 : 2007. 10. .

발 의 자 : 강순심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위생 점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점검에 대한 조치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어린이공원 등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분담을 지정(안 제8조, 제9조)

3. 관련근거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의하여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공원 중 규정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과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업무성격상 어린이공원 관련 업무와 어린이 놀이터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 업무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 공원녹지과
2. 어린이놀이터 관리업무 : 주택과

제10조(표 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5일 강순심의원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 상정(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자 : 강순심의원

나. 제안이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위생 점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점검에 대한 조치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라. 어린이공원 등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분담

을 지정(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조례의 규정형식은 법적근거를 참고하여 관련조례를 작성하였고
조례의 구성과 형식이 일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
며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제정한 조례안이라
고 판단되나 현재 입법예고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령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별첨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5인 기권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질의 및 답변요지(1)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동중 위원	○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인데 이법과 시행령의 차점이 있는지? 본 조례가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도시 관리 국장 정 유 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 26일 공포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고 2008년도 1월 27일 시행 예정에 있음 ○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법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집행부 생각은 조금이라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종 기준들과 비교 검토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	○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호의 목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하였는데 맨 경우나 안 맨 경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음 ○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고, 다만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윤종욱 위원	○ 본 조례가 타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 본 조례가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 이 안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와 같이 일단 보류를 해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임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조의 2, 3 신설)
- 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기금 집행방법을 예산회계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지방재정법」 제91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 · 구 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07. 8. 1 ~ 2007. 8. 20)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맑은환경과장, 민간인
전문가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활용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경리관과 징수관”을 “징수관”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출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관할구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 ----- ----- ----- ----- -----.
<신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

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맑은환경과장, 민간인 전문가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할용직장으로 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 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현 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p> <p>①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p> <p>③ 지방재정법중 “<u>경리관과 징수관</u>”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u>지출원과 출납원</u>”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기금관리공무원)</p> <p>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p> <p>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p> <p>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p> <p>4. .</p> <p>5. 기금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p> <p>② <삭 제></p> <p>③ -----“<u>징수관</u>” ----- -----“<u>지출원</u>” -----.</p>

참 고 자 료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나. 제안이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조의 2, 3 신설)

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기금 집행방법을 예산회계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7. 8. 1 ~ 2007. 8. 20)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현재 기금의 관리와 집행을 기금운용부서에서 모두 처리하던 것을 재무과의 복식부기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기금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선된 방안이라 하였음
- 그러나 각 자치구별 기금관리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개구가 각 기금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였고 앞으로 각 구가 기금총괄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구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총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질의 및 답변요지(1)

질의 의원	질의 요지	답변자	답변 요지
김기대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팀이 하는일이 무엇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는가? ○ 구민대학 설치조례와 평생학습조례가 중복되지 않는가? ○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행자부지침 매뉴얼 규정에 있으며 평생학습 현황조사, 수요조사, 통계 및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과 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도시는 5천만원, 30%미만인 도시는 2억원을 지원받음 ○ 구민대학은 성동구민대학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평생학습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정규교육은 교육감 하에 하되 정규교육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 권장하는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함
오수곤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평생교육사의 예상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 ○ 제2항의 소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라고 하였으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명예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월아트홀 내에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 ○ 전문직 라급으로 1년 연봉이 2,825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됨 ○ 협의회 의견 들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 위임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함
김복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구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부처의 표준안처럼 표준안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고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가 직제를 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음 광역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서울시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0
----------	-----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 주민 등 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 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0조)
- 라. 자전거이용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과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하는 사항(안 제12조,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기편성
-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8. 8 ~ 8. 28)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나 성동구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 2 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 3 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

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 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전거주차장 요금표(제9조 제1항관련)

(단위:원/구 획)

구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주차권	월 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

관 련 법 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2.“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3.“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4.“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

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주기)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전거주차장 요금표(제9조 제1항관련)

(단위:원/구획)

구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주차권	월 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나.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 주민 등 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 된 정비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0조)

라. 자전거이용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과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하는 사항(안 제12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기편성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8. 8 ~ 8. 28)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현재 우리구의 경우 자전거대여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소와 자전거이용 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구비와 시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 보관시설이 좁고 관리소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개선과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은 지침 수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별첨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오수곤 위원	○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본 조례를 통과되면 조례상에서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민이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김동중 위원	○ 뚝섬에서 성수2가3동 뚝방까지 자전거활성화계획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		○ 성동교 건너편 동부간선도내의 자전거도로는 공간이 부족하며 중랑천 중심부 쪽으로 구조물을 반복개형식으로 구조물을 달아야 하는데 이 방법에는 중랑천이 일급하천으로써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교부에서 홍수시에 유수단면 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승인이 어렵다고 생각됨
윤종욱 위원	○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어려운 것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개정 이유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0조가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항도 삭제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도로교통법 제160조

(2)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09.13 ~ 2007.10.13)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호중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 계설치조례</u>	<u>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 계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 ----- ----- -----.
제3조 (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6. <u>도로교통법 제115조의2</u>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0조 -----
7~9(생략)	7~9(현행과 같음)
10. <u>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 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목적 도로점용료</u>	10. 삭제
11. (생략)	11.(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1~4 (생략)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6~8(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6~8(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

-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점용료는 인근의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 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된 근거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0조가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항도 삭제하려는 것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07.09.13 ~ 2007.10.13)결과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의 규정이 변경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가 삭제되어 우리구 조
례의 관련조항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질의 및 답변요지(1)

질의 위원	질의요지	답변 자	답변요지
김기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팀이 하는일이 무엇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는가? ○ 구민대학 설치조례와 평생학습조례가 중복되지 않는가? ○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행자부지침 매뉴얼 규정에 있으며 평생학습 현황조사, 수요조사, 통계 및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과 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도시는 5천만원, 30%미만인 도시는 2억원을 지원받음 ○ 구민대학은 성동구민대학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평생학습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정규교육은 교육감 하에 하되 정규교육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 권장하는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함
오수곤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평생교육사의 예상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 ○ 제2항의 소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라고 하였으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명예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최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월아트홀 내에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 ○ 전문직 라급으로 1년 연봉이 2,825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됨 ○ 협의회 의견 들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 위임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함
김복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구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부처의 표준안처럼 표준시안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고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가 직제를 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음 광역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서울시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집행방법 및 회계관직을 예산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관리공무원 신설 및 변경(안 제9조제1항)

현 행	개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관리관 : 없음 - 기금경리관 : 없음 -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 기금출납원 : 치수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 기금수입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 · 구 조문대비표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7.08.13 ~ 2007.08.3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를 “「은행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목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제10조제1항 중 “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 」		----- ----- -----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 ----- . 다만 ----- 「 <u>은행법</u> 」 제2조 제1항----- -----.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치수담당주사		2.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재난관리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판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① -----
----- 서울특별시성동구 재
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1항-----

-----.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2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 상정(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는 기금집행 및 기금의 업무처리 흐름을 일반회계 복식부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금관리의 일원화 및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함

3. 주요골자

가. 기금 관리공무원 신설 및 변경(안 제9조제1항)

구 분	현 행	개 정 후
기 금 회계관직	-총괄관리관 : 없음 -기금경리관 : 없음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기금출납원 : 치수팀장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기금경리관 : 재무과장 -기금운용관 : 치수방재과장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기금수입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팀장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나. 입법예고(2007.08.13 ~ 2007.08.30)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현재 기금의 관리와 집행을 기금운용부서에서 모두 처리하던 것을 재무과의 복식부기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기금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개선된 방안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각 자치구별 기금관리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8개구가 각 기금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였고 앞으로 각 구가 기금총괄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구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총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동중 위원	○ 제5조제1항에 2명을 5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집행에 있어 업무역활의 정확한 한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 기획예산과장은 전체기금을 총괄하고 기금정리관은 재무과장으로 기금수입 및 지출을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음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지출을 초기에 확인하고, 기금수입금출납원은 토목과 굴착복구팀장으로 굴착복구 허가시 수입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
김달호 위원	○ 기금관리 조례안이 투명성확보 차원이라면 불투명한 내용이 현재까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재의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투명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면 토목과에서 통장관리를 재무과로 이관되는 것임
윤종욱 위원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현재 규모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의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2006년도 수입이 23억7천만원이고 지출이 12억2천만원, 잔고는 11억4천만원이 되어 있으며, 금년3월까지 수입이 12억6천만원, 지출은 8억8천만원 잔고는 3억 7천만원임 ○ 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2006년도분은 금년 2월에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분은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2007. 11. 7

복지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청원일 및 청원자 : 2007년 10월 25일 이 원 철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 2007년 11월 5일(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청원소개 의원 : 강 순 심의원

3. 청원소개 의견 요지

가.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금호동3가 1406번지)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불량주택으로 재건축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태임

나. 청원인의 소유주택을 적법하게 재건축하고자 하나 인접한 성동구 소유부지 96.5㎡(금호동3가 1331-16번지, 1331-4번지)가 공원부지로 건축법에 의한 진출입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다. 성동구 소유 공원부지는 청원인의 주택보다 높게 공원을 조성하여 청구인의 주택에 위험이 되고 있으며, 자투리 규모의 부지에 공원 조성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진·출입로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피해를 줌

라. 청원인은 피해구제로서 성동구의 소유 공원부지를 공원해지함으로써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함

4. 청원의 주요골자

가. 건 명 :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나. 위 치 :

다. 내 용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금호동3가 1406번지)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접한 성동구소유의 공원부지로 인해 진·출입로의 확보와 불하(拂下)가 어려워 청구인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임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이 적합하다고 하였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반대토론 : 없음 ○ 찬성토론 : 없음

9.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중 찬성 3인 기권 3인으로
불채택 되었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